

원자력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 요인과 해소 방안

이 용 수

한림대 객원 교수



원자력이 평화적으로 이용된 지 반세기가 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공스런 핵무기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공포는 물론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원자력에 대한 경각심을 한껏 불풀러 놓았다. 그리고 계속 건설되고 있는 원전에서 자연 환경을 오염시킬 방사선이 누출되지 않을 까하는 우려가 가지지 않고 있다.

인류 번영의 길잡이로서, 혹은

자칫하면 재해의 원흉으로서의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선택은 분명히 딜레마다. 에너지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래서 98%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원자력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와 함께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현대의 과학 기술 문명 시대에는 2개의 문명 집단이 존재한다. 즉 한 집단은 현대 문명 발달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는 과학 기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속 따라 잡으면서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과학 기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두 집단간에 생기는 현상들은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낭비를 조장하여 국가 정책을 어렵게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이며 이는 정책의 딜레마로 이어진다. 딜레마 현상이란 한쪽의 선택이 다른 한쪽에는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정책 결정자의 고민이다.

이런 딜레마 현상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일수록 심각하다. 첨단이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그래서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딜레마 현상은 어느 분야에서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두 문명 집단간의 갈등은 과학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철저하게 사회 문화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원자력에 관한 문제도 사회 발전의 한 과정이며 언젠가는 풀려질 수밖에 없는 한동안의 시련일 수 있다.

원자력 기술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정부의 일관성이 없는

소극적인 정책과 주민들의 애항심이 갖든 넘비적 현상 등이 원자력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인류는 종던 싫던 원자력의 물결 속에 휘말려 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우리들에게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활용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간에 원자력을 보는 시각의 차가 커 정책의 혼란과 이에 따른 사회적인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모색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현대의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귀중한 과제이기도 하다.

넘비 현상

1. 넘비 현상의 특징

일반 대중들이 싫어하는 시설 중에는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혐오 시설이나 거대한 공장과 같은 위험 시설 및 특정 질병 관리 시설과 같은 사회 복지 시설들이 있다.

이러 시설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란 사실을 모두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시설들이 자신들의 고장에 세워지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학자들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넘비(NYMBY : Not In My Back Yard)라고 이름지어 부르고 있다. 즉 자신의 뜰 안에는 안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넘비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이중적 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으로 이들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뜰에는 안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신념보다는 대중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나. 부정적인 외부성에 대한 반응

이런 시설들은 환경 오염, 지역 이미지 실추, 교통 혼잡, 건강 위협, 재산 가치 하락, 공포감 조성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지역 사회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부정적 외부성을 지니고 있다.

해당 시설 입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바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 때문에 반대한다.

다. 형평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당 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은 사회 전체에 널리 분산되는 반면,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자신들에게만 집중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

입지 시설 결정은 지리학·지질학·경제학·인구통계학·사회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반대가 가장 쉬운 수단이 될 수 있다.

마. 불확실성 및 불확실의 문제

방사성 물질이나 유독성 화학 물질 또는 기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들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논란이 있다. 들어설 시설물이 정말 안전한가, 안전하다면 어느 정도 안전한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학 기술에 대한 신념의 문제와 연결된다.

2. 넘비 현상을 보는 시각

가. 전통적인 견해

첫째, 입지 시설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에 편익을 제공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공공 시설들인데도 관련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공익 실현을 방해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시설들의 입지를 거부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해당 시설 입지 지역 사회의 이익과 전체 사회 공익간의 양립할 수 없는 마찰과 갈등을 가져온다.

둘째, 자신들의 인근 거주 지역 내에 그들이 원치 않은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비합리적이며 이기적 존재로 보는 견해다.

그러한 시설 입지 제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나 과학적인 조사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평가에 의존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보이기도하는, 주로 주관적인 판단이나 또는 감정에 의존하여 격렬하게 반발하는 비합리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지역 주민들은 그들이 원치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한다.

시설 입지 반대 운동은 신속한 기동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자·지역 정치인·언론매체 등에 시설 입지의 시정 및 중단 요구를 하거나 폭력 행사·테모 기타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 등과 같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한다.

넷째, 사업 추진자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시설 입지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민 반발은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하시킴은 물론 지역 경제를 멎게 한다.

또 사업 추진자들에 대한 불신에 따른 주민 반발은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만연시켜 정부의 공신력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급히 해결

해야 할 다른 새로운 시설 입지 사업을 지연·중단·축소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를 저해한다.

나. 급진적인 견해

첫째, 시설 입지의 어려움은 특정 시설 입지 지역 사회와 전체 사회(국가)간의 충돌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입지 지역을 포함한 전체 시민 사회(다수의 지역 사회)와 공익 실현을 주장하는 국가간의 대립과 마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자신들의 인근 거주 지역에 비선호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원치 않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인간 본연의 속성이며 이를 결코 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되는 정당한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이 훼손되며 교통이 혼잡해지고 건강이 위협받으며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며 결코 비합리적이라고 비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정부의 책임 행정을 유도하는 길잡이 구실을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아름다움과 경관과 전통 문화 유산들을 온전하게 계승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입지 시설을 둘러싼 갈등 사례

1. 방사성 폐기물 부지 선정

우리 나라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되고 나서였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시설 입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은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84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 해 방사성폐기물관리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 3차례의 협의를 거쳐 10월 13일 개최된 제 2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3대 원칙을 의결했다.

이 원칙은 첫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육지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추후 해양 처분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장을 원전 부지 외부에 집중적으로 건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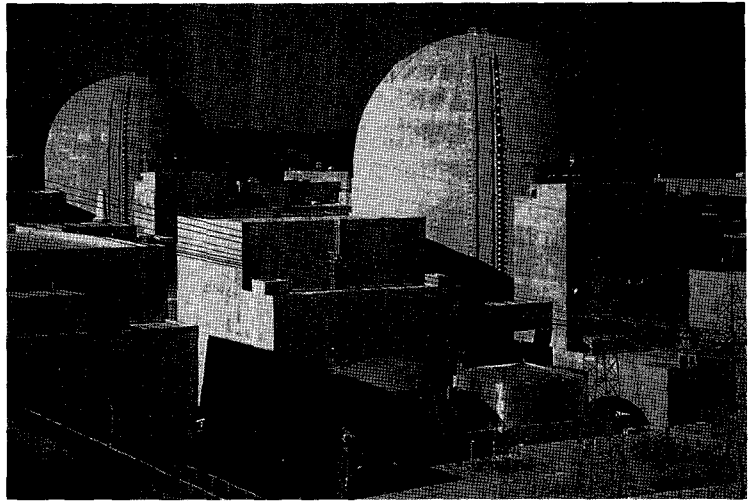
셋째,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한다로 돼 있다.

이에 따라 1986년 5월 12일에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국가 주도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법이 개정되었고, 1988년 7월 27일에 개최된 제220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영구 처분장을 1995년까지 건설하기로 의결했다.

그 해 12월 29일 열린 제221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기본 사업 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사업은 1985년부터 1987년에 걸쳐 한국전력기술(주)의 용역으로 시작돼 전국에서 89개의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해당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후보지 지정을 하지 못하다가 정부는 1994년 12월 22일 서해의 외딴섬 굴업도(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서포3리, 지금은 인천시로 편입)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도 활성 단층이라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조사 결과로 이듬해 11월 30일 부지 지정을 취소했다.

관리 부처도 오락가락하며 실패를 거듭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96년 6월 25일 열린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업은 연구 기관보다 사업 부서가 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리 부처를 과거처의 원자력연



울진 3·4호기. 오늘날 위험과 관련된 활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결정은 윤리적이거나 규범적인 문제로서 정당성을 우선 필요로 한다.

구소에서 통상산업부의 한전으로 이관키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로 주민의 유치 선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 원전 부지 선정

정부는 1980년 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남 6개소(여천군 화양면 이목리,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고흥군 도양면 장계리,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해남군 황산면 외립리, 장흥군 대덕읍 신리), 경북 2개소(울진군 근남면 신포리 및 평해읍 진산리), 강원 1개소(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등 9개소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원전 후보지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환경 문제

에 대한 범국민적인 우려와 관련 지방 자치 단체 및 주민들의 후보지 해제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산업자원부는 1998년 12월 29일 9개 후보지 가운데 8곳을 해제하고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는 기존 부지 확장 등 대안 제시를 조건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곳이 북면 덕천리다.

또한 고리 원전 부지에 인접한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대한 주민들의 원전 부지 편입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부처의 협의가 끝난 상태로 모든 원전 부지 선정 계획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원전 후보지의 지정은 그동안 거의 20여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방 자치 단체·

주민과 정부간의 대립과 투쟁은 수 많은 사회 갈등과 낭비를 가져왔다.

원전 부지 후보지의 해제 결정은 민원의 해소와 함께 최근의 경제 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것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됐다.

원전 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의 요인

1.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 문제

사회가 고도로 정보화·민주화 되어 감에 따라 행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민 참여를 주장하는 입장은 행정상 의사 결정 사항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갈등 해결을 촉진하며 일반의 관심사에 대한 관료들의 관심 유도, 외부의 관점 반영, 대부분 선출된 공무원들보다 장기적인 지역 전망이 가능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에 반해 주민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은 일반 대중, 즉 주민들이 전문 지식이 없고 의사 결정시에 초래되는 행정상의 복잡성과 비능률 및 그들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의 책임성 문제 등으로 주민 참여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는 행정의 능률을 강조하느냐, 행정의 민주성을 강조하느냐

의 관점에 따라 평가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 위험과 관련된 활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결정은 윤리적이거나 규범적인 문제로서 정당성을 우선 필요로 한다.

또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없이는 시설 입지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민 참여의 질적 수준의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전과정에 걸쳐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가 돼야 한다. 그러나 상당 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주민 참여와 함께 공개해야 할 정보는 시설 내용과 규모, 생산 또는 폐기되는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적인 복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안전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여야 한다. 그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가기도 하다.

그러나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잠재적 부지를 미리 발표하는 것은 조용히 살고 있는 일반 대중들을 불필요하게 자극시키고 그래서 무책임하고 부정확한 주장들에 대해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둘째, 일반 대중들과 환경론자들

은 유연성이 없고 무책임하며 이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들은 고도로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공개적인 기획 과정을 잠식시킬 수 있는 과잉 반발을 나타내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는다.

셋째,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지 선정을 위한 복잡한 기획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넷째, 정보 공개 기획 과정에서 시설 입지 사업자와 주민간에 조정에 도달할 가망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혼돈이 창출되고 갈등이 격렬해질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에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2. 보상 문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소음·악취·매연·교통 혼잡·공포심 등을 유발하고 건강 손상·자연 훼손 등의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며 그 비용은 해당 지역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들 시설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은 사회 전체로 분산된다.

따라서 이런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보상책이 없거나 보상 수준이 너무 낮고 또는 보상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인 상태에서의 사업 강행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나친 희생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적절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주민들의 비선호 시설의 입지는 특정 지역의 지나친 희생과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촉발시키고 이는 다시 주민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3. 사업 추진자들의 신뢰성 문제

위험의 수용은 위험 관리에 대한 확신에 크게 영향 받는다. 오늘날 원자력을 다루는 과학자·공무원·사업 관리자에 대한 신뢰는 붕괴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할 뿐이며, 해당 입지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자신들의 인근 거주 지역에 그들이 원치 않는 시설, 즉 비선호 시설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 땅값 하락, 소음 및 악취 발생, 주변 환경의 훼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도, 사업 추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치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불신은 창조보다 파괴를 가져오

기 쉽고 한 번 파괴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우며 뚜렷한 회복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반대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게 된다.

불신과 관련된 심리기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① 부정적인(신뢰를 파괴하는) 사건들은 긍정적인 사건들보다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주목을 끈다.

부정적인 사건들은 뜻밖의 사건, 거짓말, 실수, 잘못된 관리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건은 간혹 눈에 띄고 흔히 명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② 사건들이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 때 부정적인 사건들이 긍정적인 사건들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③ 인간은 나쁜(신뢰를 파괴하는) 소식의 원천을 좋은 소식의 원천에 비해 보다 믿을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④ 일단 불신이 시작되면 이 불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하나는 불신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개인적인 접촉이나 경험을 차단시키는 경향이 있다.

불신 제거를 위한 다른 조치를 회피함으로써 불신은 가중되어 결코 불신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게

된다.

둘째는 초기의 신뢰나 불신은 사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초기의 신뢰가 강화된다. 가령 TMI 사고에 대해 원자력을 믿는 사람들은 심층 방어 개념을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이전에 원자력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우선 책임자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재난을 오직 운으로 돌리고 있다고 상반된 견해를 가진다.

4. 부정적 외부 효과를 과장 혹은 과도하는 환경 단체와 언론들의 영향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반핵 단체의 구호들은 “원전 시설이 들어오면 무뇌아가 발생하고 기형 가축이 생긴다”였다. 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방사능에 오염돼 있어 반출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아주 근거없는 것인데도 실제로 이런 말을 들은 주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음으로써 자신들의 고장에 원자력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으로써 그런 주장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또 언론의 경우 비록 사실이 아닌 것들이 반핵 단체들이나 기타 관련자들에 의해 주장될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부터 하므로 원자력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게 한다.

문제점

1. 주민들의 참여 기회

방사성 폐기물 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임에도 초기에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입지를 결정한 후에도 공청회 등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전연 주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자극시키고 나아가 지방 행정 관료까지도 반핵 운동에 동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2. 정보를 철저히 배제했다

안면도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한다는 초안이 1990년 9월 원자력위원회를 통과하고서도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이 사실은 전연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이 알려짐으로써 반대의 목소리가 클 것이란 계산 때문이었다.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심한 소외감을 느꼈고 아울러 그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지 못했다.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반핵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한 일방적인 위협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만 난무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주민의 반대는 당연한 결과로 나타났다.

3. 보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시설 입지 선정과 보상 계획은 맞물려 계획되어야 하는데도 초기 경북의 3곳이나 안면도에서는 전연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설사 계획 자체가 비밀로 돼 있다 할 지라도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야 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세번째 시도, 즉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 계획에서는 특별 보상금을 마련하는 등 보상 계획을 세웠으나 이미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런 대책은 먹혀들지 않았다.

4.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방사선 처분장 건설 사업이 계획된 것은 모두 5·6공 정부에서 비롯된다. 이 시기는 국내적으로 정부의 정통성 시비에 엇갈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호감을 갖지 못

했다.

많은 반정부 인사들이 환경 문제를 반정부 운동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도 상부의 지시를 거의 듣지 않은 상태였다. 오히려 주민의 편에서 서서 시위를 방관하거나 묵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5.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없었다

지방 공무원들이 중앙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마저도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로 주민의 반대 의사에 동조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은 오직 선거를 겨냥하여 자신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국가적인 사업보다 주민의 의사에 영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마찰은 심해지고 있다.

6.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얼마만큼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다.

원전 시설이 들어선 지도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고 난 이후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종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한국전력 직원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비교할 때 오히려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발전소의 주변 지역은 여전히 옛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슬럼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7. 지역 지원 내용이 과소 평가되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고리·울진·영광·월성 등 4곳에는 법이 정한 지역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실제로 이들 4곳에 지원된 금액은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모두 1천억원 이상이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해당 주민들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각 지역별 지원금을 보면 고리 20,834백만원, 울진 28,381백만원, 영광 32,470백만원, 월성 24,407백만원이였다.

앞으로의 과제

1.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

세계적으로 주민의 참여 방식에

는 공청회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본의 로카쇼무라나 영국의 드레이크 처분장 및 프랑스의 로브 처분장 등 여러 곳이 대표적인 사례 지역들이다.

여론의 핵심 인사(core)들의 이해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지방 자치 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보의 공개

정보의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자력 자체가 비교적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정보의 공개 노력이 중요하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하고 반핵 단체에서 제공하는 그릇된 정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정보의 공개는 ‘원자력 발전이나 폐기물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설 지구를 지정하는 절차상의 문제와 보상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과 함께 유익한 사업’이란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3. 적절한 보상

보상 계획은 시설 지구 구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보상에는

생활권, 즉 어업이나 농업 등 직업상 피해를 고려한 보상과 수용 토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시설 지구 지정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

현지 생산물을 수용하는 것 등 가능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 지구 지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보상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

보상은 또한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불안에 대한 보상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 보상의 원칙은 이 시설 때문에 이익을 보는 다수가 손해(물질적·정신적)를 보는 소수를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수행돼야 한다.

4. 사업 추진자들의 신뢰성 확보

사업자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주장을 따를 수 있는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시설 가운데 적어도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잘 사는 마을’이란 상징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이런 구상은 새로운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고려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원전 부지를 기존의 시설 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 시설 지역을 삶의 질이 보장된 쾌적한 사회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5. 안전성에 대한 신뢰의 모색

안전성은 원자력 정책의 핵심이다. 안전성은 본질적으로 과학 기술적인 문제다.

설계에서 보장되고 있는 안전 기준이 시공 운전 관리 단계에서 기능토록 하는 계속적인 교육 훈련은 원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또한 시민 교육을 통한 위험의 인식에 대한 교육은 현장의 교육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6. 북한과의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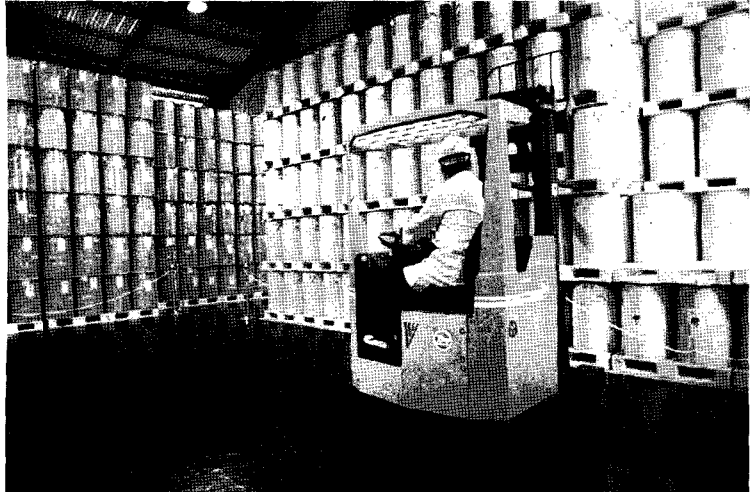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어떤 지역에 남한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는 북한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남한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결론

한국에서의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다른 지역의 대안으로 제시된 북면 대천리와 울주군 서생면이 마지막 결정의 시점에 와있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이미 12기의 원전이 운전되고 있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 정보의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자력 자체가 비교적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정보의 공개 노력이 중요하다.

는 현실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원자력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한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감안하면서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그래서 사용 에너지의 98%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한국으로서 선택해야 할 에너지 정책은 국산 에너지인 원자력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비록 그것이 가진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인류는 이미 과거 50년간 원자력 발전 기술을 이용하면서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했다. 다만 우리의 인식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다.

현대의 과학 기술을 믿는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자립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원자력은 에너지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의료·산업·과학 연구 분야에서 원자력의 이요 가능성은 무한하다.

에너지 자원이 없기로는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이나 프랑스가 미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비교적 초연한 것은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원자력 이용 기술 때문이다.

원자력 시설 부지 선정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면 원자력 시설 이용으로 이익을 보는 다수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은 운전자 및 과학 기술인들의 몫이다.

원자력 시설에서 비롯되는 피해를 없앤다는 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원자력의 국민적인 합의는 결코 어렵지 않다고 본다.